

<2023 경찰간부 행정학 해설>

01. 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행정은 넓은 의미로 공공단체, 기업체, 민간단체를 포함한 모든 조직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활동이다.
- ② 공·사행정 이원론에서는 행정과 경영의 유사점과 함께 효율적 관리를 강조한다.
- ③ 윌슨(Wilson)은 「행정연구(The Study of Administration, 1887)」에서 정치와 행정의 통합을 주장한다.
- ④ 정치·행정 이원론은 행정에 내포되어 있는 정치적인 기능을 강조한다.

<해설>

- ① (O) 넓은 의미의 행정은 관리기술이나 협동 행동으로 정부, 기업, 비영리민간단체 등 모든 조직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 ② (X) 행정과 경영의 유사점과 함께 효율적 관리를 강조 → 공·사행정일원론
- ③ (X) 윌슨의 행정연구는 행정의 정치로부터의 독립을 강조했습니다(정치행정이원론).
- ④ (X) 행정의 정치적 성격 강조 → 정치·행정 일원론

답: ①

02. 행정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공익에 대해 과정설에서는 사익을 초월한 별도의 공익이 존재하며, 집단 간 상호작용을 통해 도출된다고 인식한다.
- ② 롤스(Rawls)에 따르면 무지의 베일에 가려진 원초적 상태에서 합리적 인간은 최대극소화(minimax) 원리에 따라 의사 결정을 한다.
- ③ 사회적 능률성(social efficiency)은 디목(Dimock)이 제시한 개념으로 인간관계론의 등장과 함께 강조된다.
- ④ 효과성(effectiveness)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직 내부적 관계가 강조된다.

<해설>

- ① (X) 사익을 초월한 별도의 공익이 존재한다는 것은 공익의 실제설의 입장입니다. 공익의 과정설에서는 집단 간 상호작용을 통해 공익이 도출된다는 입장입니다.
- ② (X) 최대극대화 원리가 아닌 최소극대화(Maximin) 원리입니다.
- ③ (O) 사회적 능률성은 통치기능설의 학자인 디목이 강조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능률성은 인간관계론과 통치기능설에서 강조되었습니다.
- ④ (X)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은 능률성입니다. 효과성은 목표 달성도를 의미합니다.

답: ③

03. 행정학 관련 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굿노(Goodnow)는 정치는 국가의지의 표현이며, 행정은 이를 실천하는 것으로 정치와 행정의 차이를 명확히 구별했다.
- ② 테일러(Taylor)는 시간과 동작에 관한 연구를 통해 최고관리자의 기능으로 POSDCoRB를 제시했다.
- ③ 애플비(Appleby)는 정치와 행정의 관계는 연속·순환적이어서 양자를 구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 ④ 메이요(Mayo)는 호손실험을 통해 생산성 향상에 비공식적 집단이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해설>

- ① (O) 굿노는 '정치와 행정(1900)'에서 정치는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고, 행정은 국가의 의사를 실천하는 것이라 주장(정치와 행정의 차이를 분명히 함)하였습니다.
- ② (X) POSDCoRB를 제시한 학자는 굴릭입니다. 굴릭은 'Papers of the Science of Administration'(1937)에서 행정의 제1공리로 능률을 강조하며 능률적인 구조설계(POSDCoRB: 최고관리자의 기능, 하향적 조직 편성)를 강조하였습니다.

답: ②

04. 시장실패와 그에 대한 대응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지닌 공공재로 인해 무임승차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공적 공급이 필요하다.
- ② 외부불경제의 경우 정부의 개입 없이 과소공급되므로 정부는 보조금을 비롯한 공적 유도가 필요하다.
- ③ 정보의 비대칭성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공적 유도나 정부규제가 필요하다.
- ④ 규모의 경제가 적용될 때 자연독점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공적 공급이나 정부규제가 필요하다.

<해설>

- ① (O) 공공재의 존재로 인한 시장실패는 공적 공급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② (X) 외부불경제: 다른 경제주체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 (ex 환경오염, 공해) → (시장에 맡길 경우) 과다생산(과소공급 X) → 정부규제(보조금 X)
- ③ (O)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문제는 시장에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되, 보조금(공적 유도)을 주고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하거나 정부규제를 통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못 하게 할 수 있습니다.
- ④ (O) 자연적으로 독점산업이 되는 경우에는 정부규제를 하거나 정부가 직접 공급(공적 공급)합니다.

답: ②

05. 정책과정 참여자 중 비공식적 참여자만 모두 나열한 것은?

- ① 정당, 이익집단, 언론, 전문가집단
- ② 국회, 정당, 전문가집단, 지방정부
- ③ 정당, 이익집단, 전문가집단, 사법부
- ④ 대통령, 이익집단, 언론, 전문가집단

<해설>

- ① (O) 정당, 이익집단, 언론, 전문가집단은 모두 비공식적 참여자입니다.
- ②, ③, ④ (X) 국회, 지방정부, 사법부, 대통령은 공식적 참여자입니다.

답: ①

06. 정부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윌슨(Wilson)은 규제에 의한 비용은 분산되고 편익은 집중되는 상황을 이익집단정치로 분류하고, 여기에서 포획현상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 나. 포지티브 규제는 '원칙 금지', '예외 허용'의 형태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금지하는 방식이다.
- 다. 관리규제는 정부가 특정한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목표 달성 수준을 정하고, 피규제자에게 이를 달성할 수단과 방법에 대해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 라.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두고 있다.
- 마.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르면 규제의 존속기한을 규제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 가. (X) 규제에 의한 비용은 분산되고 편익은 집중되는 상황 → 고객정치
- 나. (O) '원칙 금지', '예외 허용' → 포지티브 규제
- 다. (X) 정부가 특정한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목표달성 수준을 정하고 규제를 받는 자에게 이를 달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 → 성과규제
- 라. (O)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
- 마. (X) 3년이 아니라 5년입니다(「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설치)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 제8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키한 명시) ②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답: ②

07. 공공선택이론의 주요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뷰캐넌과 툴록(Buchanan & Tullock)은 참여자 수가 많을 수록 외부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총비용도 증가하므로 적정 참여자 수를 강조한다.
- ② 티부(Tiebout)는 '발에 의한 투표'가 공공재 공급과정에서 중앙정부의 독점적 역할을 강화시킨다고 주장한다.
- ③ 니스카넨(Niskanen)은 관료가 총편익과 총비용의 차이인 순 편익이 최대가 되는 수준에서 공공서비스를 공급한다고 주장한다.
- ④ 던리비(Dunleavy)는 예산의 성격과 기관유형 등에 따라 고위 관료들이 예산극대화 행동에 소극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해설>

- ① (X) 최적참여자 수 모형(Buchanan & Tullock)에서 외부비용이란 어떤 대안이 채택됨에 따라 반대 측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합의인원이 많아질수록 외부비용은 감소합니다.
- ② (X) 티부모형은 중앙정부의 개입 없이(분권화된 시장 메커니즘) 지방공공재 적정 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중앙정부의 독점적 역할 강화 X).
- ③ (X) 관료는 총효용=총비용이 되는 지점까지 생산하려고 합니다.
- ④ (O) 던리비의 관청형성 모형에서는 소속기관의 성격이나 지위(고위직, 중·하위직)에 따라 관료들의 이익극대화 방식이 달라진다는 입장입니다.

답: ④

08.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신공공관리는 정부를 노젓기의 중심에 놓는 반면, 뉴거버넌스는 정부와 시장, 시민사회의 평등관계를 강조한다.
- ② 신공공관리는 경쟁과 선택을 중시하는 반면, 뉴거버넌스는 네트워크나 협력을 강조한다.
- ③ 신공공관리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뉴거버넌스는 결과에 초점을 둔다.
- ④ 신공공관리는 관료를 조정자로 보는 반면, 뉴거버넌스는 관료를 공공기업가로 본다.

<풀이의 핵심>

○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

| | |
|----------------------------|---------------------------------------|
| 신공공관리 | 뉴거버넌스 |
| 신자유주의 | 공동체주의 |
| 시장 | 연계망(네트워크) |
| 결과(효율성, 능률성) | 신뢰(민주성, 과정) |
| 방향잡기 (방향잡기 중심에 정부 존재) | 방향잡기 (정부와 시장 및 시민사회의 평등한 관계 중시) |
| 공공기업가 | 조정자 |
| 경쟁(시장메커니즘) | 협력 체제 |
| 민영화, 민간위탁 등 | 공동공급(시민, 기업 등 참여) |
| 고객 지향 | 임무 중심, 시민 지향 |
| 조직 내 | 조직 간 |
| 정부재창조론 (성과주의에 기반한 정부개혁) | 시민재창조론 (시민의 능동적 참여 강조) |
| 공사행정일원론 | 정치행정일원론 |

<해설>

- ① (X) 신공공관리는 방향잡기의 중심에 정부가 존재한다는 입장입니다(노젓기의 중심 X).
- ③ (X) 신공공관리가 결과에 초점을, 뉴거버넌스는 과정에 초점을 둡니다.
- ④ (X) 신공공관리가 관료를 공공기업가로 보고, 뉴거버넌스는 관료를 조정자로 봅니다.

답: ②

09. 정책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가. 로위(Lowi)의 분배정책에서는 포크배럴(pork-barrel)이나 로그롤링(log-rolling) 현상이 나타난다.
- 나. 리플리와 플랭클린(Ripley & Franklin)의 보호적 규제정책은 분배정책과 규제정책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고, 진입규제가 이에 해당한다.
- 다. 알몬드와 파월(Almond & Powell)의 상징정책은 정치체제에 대한 정당성과 신뢰성을 위한 정책으로 조세, 징병 등이 이에 해당한다.
- 라. 리플리와 플랭클린(Ripley & Franklin)의 재분배정책은 정책집행을 위한 안정적 절차화 가능성이 낮고 집행을 둘러싼 이데올로기 논쟁 강도는 높다.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가, 라 ④ 나, 다

<해설>

- 가. (O) 분배정책의 수혜자들은 더 많이 배분받으려고 하여 포크배럴(pork-barrel)이나 로그롤링(log-rolling) 현상이 나타납니다.
- 나. (X) 분배정책과 규제정책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규제는 경쟁적 규제정책입니다.
- 다. (X) 조세, 징병 → 추출정책의 사례입니다.
- 라. (O) 재분배정책은 어느 정도로 재분배할지에 대한 이념적 성격이 강하고 소득계층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일률적인 집행절차의 확립이 어렵습니다.

답: ③

10. 미래예측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연결이 옳은 것은?

- 가. 관련 사건의 발생 여부에 기초하여 미래 특정 사건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이끌어내는 분석기법
- 나. 즉흥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창의적 의견이나 독창적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집단토의기법
- 다.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익명성이 보장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설문조사 과정을 통해 의견조정과 합의를 유도하는 기법

| | 가 | 나 | 다 |
|----------|--------|--------|---|
| ① 델파이 | 브레인스토밍 | 교차영향분석 | |
| ② 교차영향분석 | 브레인스토밍 | 델파이 | |
| ③ 브레인스토밍 | 델파이 | 교차영향분석 | |
| ④ 교차영향분석 | 델파이 | 브레인스토밍 | |

<해설>

- 가. 관련 사건의 발생 여부에 기초하여 미래 특정 사건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판단 → 상호관련성이 있는 사건의 발생 여부에 따른 미래 특정 사건의 발생확률 예측 → 교차영향분석
- 나. 즉흥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 → 자유분방 → 브레인스토밍
- 다. 전문적 지식과 경험, 익명성, 설문조사 → 델파이

답: ②

11.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만족모형에서 정책담당자는 제한된 합리성으로 인해 모든 대안을 탐색하지 않고 몇 개의 대안만을 무작위적이고 순차적으로 탐색한다.
- 나. 혼합주사모형은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두 요소를 절충한 것으로 근본적 정책결정은 점증모형을, 부분적 정책결정은 합리모형을 따른다.
- 다. 쓰레기통모형은 조직화된 무질서 상태에서의 정책결정을 설명하며 정책결정 요소들이 우연히 만나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 라. 앨리슨(Allison)의 관료정치모형은 조직 하위 계층에 적용가능성이 높고, 앨리슨의 세 가지 모형은 실제 정책결정을 설명하는데 모두 부분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 마. 정책딜레마모형은 갈등집단들의 내부응집력이 약하고 집단 간 권력이 불균형적일 때 딜레마가 증폭된다고 본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 가. (O) 만족모형에서 정책담당자는 제한된 합리성으로 인해 모든 대안을 탐색하지 않고 몇 개의 대안만을 무작위적이고 순차적으로 탐색합니다.
- 나. (X) 혼합주사모형에서 근본적 결정은 합리모형, 세부적 결정은 점증모형을 적용합니다.
- 다. (O) 쓰레기통모형은 조직화된 무정부(organized anarchy) 상태 속에서 조직이 어떠한 결정 행태를 나타내는가에 연구의 초점을 둔 모형입니다.
- 라. (X) 앨리슨(Allison)의 관료정치모형은 조직 상위 계층에 적용가능성이 높습니다.
- 마. (X) 정책딜레마모형은 갈등집단들의 내부응집력이 강할 때, 갈등집단 간 권력균형이 이루어져 있을 때 딜레마가 증폭된다고 봅니다.

답: ②

12. 나카무라와 스몰우드(Nakamura & Smallwood)가 분류한 정책집행 유형 중 '재량적 실험가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전문성과 기술 등의 능력과 기업이 정신을 발휘하여 정책결정자의 권력을 장악하고 정책과정을 지배한다.
- ② 정책목표와 수단에 대해 정책결정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집행과정을 통해 정책목표와 수단에 대해 결정자와 협상한다.
- ③ 정책결정자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책목표를 구체화하고 필요한 정책 수단을 선택하는 등 광범위하고도 구체적인 책임 하에 정책을 집행한다.
- ④ 정책결정자가 정책목표와 대체적 방침을 정한 상황에서 목표의 집행에 필요한 폭넓은 재량권을 위임받아 정책을 집행한다.

<풀이의 핵심>

재량적 실험형: 광범위한 재량권, 추상적 목표

<해설>

- ① (X) 정책집행자가 정책결정자의 권력을 장악하고 정책과정을 지배 → 관료적 기업가형
- ② (X) 목표와 수단에 대한 집행자와 결정자의 협상 → 협상형
- ③ (O)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는 상황, 광범위한 책임 → 재량적 실험가형
- ④ (X) 정책결정자가 정책목표와 대체적 방침을 정한 상황, 관리적 행위에 관한 권한들을 정책집행자에게 위임하기 때문에 정책집행자는 많은 재량을 행사할 수 있음 → 지시적 위임형

답: ③

13. 정책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구성타당성은 실험에 있어서 인과적 추론의 정확성을 말하며 성숙효과가 있을 때 저해된다.
 - ② 외적타당성은 실험결과의 일반화 수준으로 표본의 대표성이 높을 때 저해된다.
 - ③ 내적타당성을 저해하는 모방효과는 실험 직전 극단적인 점수를 얻은 사람이 실험 진행과정에서 원래 성향으로 돌아가는 현상을 말한다.
 - ④ 신뢰성은 동일한 측정도구를 반복 사용할 때 동일한 결과를 얻을 가능성으로 타당성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해설>

- ① (X) 정책수단과 정책효과 사이의 인과관계의 정확성은 내적 타당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구성타당성은 측정도구(또는 측정수단)와 이론적 구성개념의 일치정도(처리, 결과, 모집단 등 이론적 구성요소들이 성공적으로 조작화된 정도)입니다. 참고로 성숙효과는 내적타당성 저해요인입니다.
- ② (X) 외적타당도란 특정한 상황에서 내적 타당도를 얻은 정책 평가가 외적으로도 타당한지 여부로, 표본의 비대표성이 외적타당도 저해요인입니다.
- ③ (X) 실험 직전 극단적인 점수를 얻은 사람이 실험 진행과정에서 원래 성향으로 돌아가는 현상 → 회귀인공요인
- ④ (O) 신뢰성은 일관성을 의미하며 타당성의 필요조건입니다.

답: ④

14. 조직몰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직몰입은 조직구성원이 소속조직 및 소속조직의 목표와 일체화되어 그 조직의 구성원으로 남기를 원하는 태도의 수준을 말한다.
- ② 태도적 조직몰입은 조직구성원이 조직의 목적과 가치를 동일화하여 내재화할 때 발생된다.
- ③ 행위적 조직몰입은 조직구성원이 도덕적인 또는 윤리적인 이유로 조직에 남는 행동을 의무로 생각하는 태도이다.
- ④ 타산적 조직몰입은 조직구성원이 조직으로부터 보상과 비용의 이해타산에 따라 조직에 몰입하게 되는 태도이다.

<풀이의 핵심>

○ 조직몰입의 차원

1) 알렌과 마이어(Allen&Meyer)

- (1) 정의적 차원: 조직에 소속되고 조직과 동일화되려는 조직구성원의 감정적 애착심
- (2) 지속적 차원: 만약 조직을 떠날 경우 조직구성원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에 기초.
- (3) 규범적 차원: 조직구성원이 조직에 머물러는 의무감

2) 라이처스(Reichers)

- (1) 타산적 조직몰입: 조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상과 비용의 이해타산과 관련된 몰입
- (2) 행위적 조직몰입: 행위적 조직몰입은 조직 구성원의 표시된 행위적 특성들을 조직몰입의 동인으로 한정하는 개념. 개인은 분명한 행위나 의사를 표시하였을 때(explicitness), 그 행위나 의사 표시가 번복불가능하다고 보여진 때(irrevocability), 대체할만한 조직이 부족할 때(insubstitutability), 그리고 그 행위나 표시가 높은 수준의 공공성을 가질 때(publicity) 높은 수준의 행위적 몰입도를 보임. 가령, 단체장에 입후보한 사람이 유세장에서 분명하고 공공연하게 그리고 거의 번복 불가능한 공약을 제시하였다면 그는 당선된 뒤에 그 공약을 지키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임.
- (3) 태도적 조직몰입: 소속 조직의 목적과 가치를 동일화하여 내재화함에 따른 몰입

<해설>

- ① (O) 조직몰입이란 조직에 대해 갖고 있는 개인적 태도로서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그 조직에 얼마나 헌신하고자 하는가 정도, 즉 조직구성원이 조직에 대해 가지는 애착의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③ (X) 조직구성원이 도덕적인 또는 윤리적인 이유로 조직에 남는 행동을 의무로 생각하는 태도는 규범적 차원의 조직몰입입니다.

답: ③

15. 조직진단을 위한 환경분석 방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스왓(SWOT) 분석
- ② 페스트(PEST) 분석
- ③ 스텝퍼(STEPPE) 분석
- ④ 비용편익(B/C) 분석

<해설>

- ① (O) 스왓(SWOT) 분석은 하나의 분석단위(ex 조직)를 중심으로 조직의 외부환경을 분석하여 기회(Opportunities)와 위협(Threats) 요인을, 조직 내부를 분석하여 강점(Strengths)과 약점(Weakness) 요인을 찾아내 환경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을 위한 도구로 개발되었습니다.
- ② (O) 페스트(PEST) 분석은 정치, 경제, 사회, 기술 측면의 거시환경 분석기법으로 SWOT분석의 외부환경요인인 기회와 위협 분석 시 활용됩니다.
- ③ (O) 스텝퍼(STEPPE) 분석은 불확실한 미래를 보다 명료하게 예측하기 위해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7가지 핵심동인인 사회, 기술, 환경, 정치, 인구, 경제, 자원을 분석하는 기법입니다.
- ④ (X) 비용편익(B/C) 분석은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는 기법으로 조직진단을 위한 환경분석 방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답: ④

16. 네트워크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관리와 안정적 공급 확보가 용이하다.
- ②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시간·공간 제약이 완화된다.
- ③ 참여 주체의 기회주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비용이 증가한다.
- ④ 조직 경계가 모호해 정체성이 약하고 응집력이 있는 조직문화를 가지기 어렵다.

<해설>

- ① (X) 네트워크 조직은 외부기관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 제품의 품질관리와 안정적 공급이 곤란합니다.

답: ①

17. 책임운영기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1999년에 시범사업이 시행되었다.
- ②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는 매년 기획재정부 장관이 평가단을 구성하여 지원한다.
- ③ 소속책임운영기관과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구분되며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는 특허청이 유일하다.
- ④ 소속책임운영기관장의 임기는 5년의 범위에서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신분은 공무원이다.

<해설>

- ① (O)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1999년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1월부터 국립중앙극장 등 10개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시범운영이 실시되어 옳지 않은 지문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옳지 않은 지문은 2번이라 일단 2번으로 답을 해야 합니다(최종정답 2번).
- ② (X)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는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장관은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하거나 지정하여 평가업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9조(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책임운영기관의 존속 여부 및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1조(책임운영기관의 종합평가) ① 위원회는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운영과 개선, 기관의 존속 여부 판단 등을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를 한다. 다만, 종합평가 결과가 2회 연속 특별히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평가를 유예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하거나 지정하여 평가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답: ②

18. 쟁계(Senge)가 제시한 학습조직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 ① 집단적 사고(collective thinking)
- ② 개인적 숙련(personal mastery)
- ③ 공유비전(shared vision)
- ④ 사고모형(mental model)

<풀이의 핵심>

- 쟁계가 제시한 학습조직의 성립에 필요한 다섯 가지 수련: 자기완성(전문적 소양), 사고의 틀(세계관), 공동의 비전, 집단적 학습(팀 학습), 시스템 중심의 사고

<해설>

- ① (X) 집단적 사고가 아닌 집단적 학습이 구성 요소입니다.
- ②, ③, ④ (O) 개인적 숙련(자기완성), 공유비전, 사고모형(사고의 틀)은 쟁계가 제시한 학습조직의 구성요소입니다.

답: ①

19. 강화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스키너(Skinner)의 자극-반응의 심리학에서 발전된 동기부여 이론이다.
- ② 적극적 강화란 자극에 따른 반응 행동에 관해 제공되는 보상이나 기타 바람직한 결과를 말한다.
- ③ 회피는 바람직한 행동을 하게 될 경우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제거하는 것이다.
- ④ 연속적 강화란 바람직한 행위에 대해 미리 계획된 일정한 간격으로 강화 요인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

- ① (O) 강화이론은 스키너의 연구성과에 기초하고 있는 조작적 조건반사라는 학습의 개념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조건반사이론은 심리학자들이 심리학의 행태학파라고 부르는 것에서 유래되어 있습니다.
- ② (O) 적극적 강화는 바람직한 행동을 보였을 때 그 개인이 원하는 결과(보상)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 ③ (O) 회피는 바람직한 행동을 보였을 때 기존의 행위자에게 추가되었던 불쾌한 결과나 벌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 ④ (X) 일정한 간격으로 강화 요인을 제공 → 고정간격법과 관련된 설명입니다. 연속적 강화란 바람직한 행동이 나올 때마다 즉각적인 강화를 해주는 방법입니다.

답: ④

20. 총체적 품질관리(TQM)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공공관리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 ② 목표관리제(MBO)의 목표설정은 외향적이나 총체적 품질관리의 목표설정은 내향적이다.
- ③ 품질 향상을 통한 고객만족을 최종 목표로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행태를 고객중심적으로 전환할 수 있다.
- ④ 업무수행 노력의 초점이 개인적 노력에서 집단적 노력으로 옮겨간다.

<해설>

- ① (O) 1980년대 이후 총체적 품질관리는 미국에서 크게 확산되었습니다. 서비스 개선에 대한 압력과 세금감축·정부감축에 대한 압력을 동시에 받도 있는 정부부문은 총체적 품질관리에서 하나의 돌파구를 보았습니다.
- ② (X) TQM의 관심은 고객입니다. 외부지향적입니다. MBO는 구성원들의 참여와 환류를 통한 내부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둡니다(내향적).
- ③, ④ (O) 총체적 품질관리는 고객의 요구를 존중하고, 문제해결의 주된 방법에서는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집단적 노력입니다.

답: ②

21.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 단위의 설립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및 하부기관에 설립할 수 있다.
- ③ 기관 단위로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하나의 기관에 복수의 협의회 설립이 가능하다.
- ④ 두 개 이상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 간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없다.

<해설>

- ① (O)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② (O)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 ③ (X)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협의회는 기관 단위로 설립하되, 하나의 기관에는 하나의 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 ④ (O) 출제당시 법률에 의하면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2022년 10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법률에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내에 설립된 협의회를 대표하는 하나의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설립)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기관 단위로 설립하되, 하나의 기관에는 하나의 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있다.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직장협의회 설립기관의 범위)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 단위는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이 된다. 다만, 기관장이 5급 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의 수 및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장이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한다.

답: ③

22. 중앙인사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안전행정부의 인사기능을 분리하여 인사혁신처가 신설되었다.
- ② 인사혁신처는 비독립단독형 기관으로 입법부·행정부·사법부의 인사업무를 총괄한다.
- ③ 준사법 기능은 중앙징계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수행한다.
- ④ 인사혁신처는 국무총리 소속이며 처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다.

<해설>

- ① (O)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고의 영향으로 2014년 11월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안전행정부에 있던 국가 안전 기능과 중앙정부의 인사 기능을 분리하여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신설하였습니다.
- ② (X) 인사혁신처는 국무총리 소속의 비독립단독형 기관입니다. 행정부의 중앙인사관장기관입니다(입법부·행정부·사법부의 인사업무를 총괄 X). 국회는 국회사무총장, 법원은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중앙인사관장기관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6조).
- ③ (O) 준사법적 기능이란 구속력 있는 제재나 의결을 하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하고,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합니다.

답: ②

23. 실적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포함한다.
- ② 미국에서는 1883년 펜들턴법(Pendleton Act)을 계기로 실적제가 확립되었다.
- ③ 공무원 인력의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다.
- ④ 공무원은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능력과 자격에 따라 채용된다.

<해설>

- ①, ④ (O) 실적제는 인사행정이나 공직임용의 기준을 개인의 능력·자격·실적 등에 기초한 제도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 ② (O) 미국의 경우 펜들턴법(1883년) 제정을 계기로 실적제가 확립되었습니다.
- ③ (X) 실적제는 객관적 인사행정에 주력하여 경직적인 인사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탄력적 운영 X).

답: ③

24. 직무평가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서열법은 직위의 등급 수를 미리 정하고 등급기준표를 활용한다.
- ② 점수법은 직무의 평가요소별 가중치를 부여하고 각 직무에 대하여 요소별로 점수를 매기는 방법이다.
- ③ 요소비교법은 대표 직위(key position)를 선정하여 대표 직위의 평가 요소별 서열을 정하는 방법이다.
- ④ 분류법은 등급별로 책임도, 곤란성, 필요한 지식과 기술에 관한 기준을 고려하여 직무를 해당 등급에 배치하는 방법이다.

<해설>

- ① (X), ④ (O) 등급기준표를 활용하는 것은 분류법입니다. 분류법은 등급별로 책임과 곤란도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직무를 해당되는 등급에 배치하는 방법입니다.

답: ①

25. 근무성적평정 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심화 경향(central tendency)은 평정자가 피평정자들에게 대부분 중간 수준의 점수를 주는 심리적 경향을 일컫는다.
- ② 후광 효과(halo effect)는 피평정자의 두드러진 특성이 다른 세부 특성을 평가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
- ③ 관대화 경향(leniency tendency)은 평정결과의 분포가 우수한 쪽으로 집중되는 경향을 말한다.
- ④ 초두 효과(primacy effect)는 피평정자의 근무성적평정기간에 가장 근접한 기간의 업무수행 실적일수록 평정에 더 크게 반영하는 오류를 말한다.

<해설>

- ④ (X) 막바지효과(recency effect, 근접효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머리효과(primacy effect, 최초효과)는 전체 기간의 근무성적을 평가하기보다는 초기의 업적이 근무성적 평가에 큰 영향을 주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답: ④

26. 공무원 성과급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공무원 6급(상당) 이하 및 모든 임기제 공무원은 성과상여금제 적용 대상이다.
- ② 국가공무원 5급(상당) 이상과 국립대학교 교원은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이다.
- ③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이다.
- ④ 고위공무원단은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이다.

<해설>

- ① (X), ② (O)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은 성과상여금 적용대상입니다. 성과급적 연봉제(성과연봉) 적용대상은 1~5급(상당) 이상 공무원 및 일반·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제임기제 포함), 국립대학교 교원으로 모든 임기제 공무원이 성과상여금제 적용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답: ①

27. 현행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으로 모두 묶인 것은?

- 가. 법령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직 기간 20년 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만 65세가 되는 때부터 퇴직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 나. 기여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이다.
- 다. 고액연금 수급 방지를 위한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80%이다.
- 라. 기금제와 기여제를 채택하고 있다.
- 마. 유족연금 적용률은 60%이다.
- 바. 연금지급률은 재직기간 1년당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9%이다.

- ① 가, 다, 마 ② 나, 라, 마
- ③ 나, 라, 바 ④ 다, 라, 마

<해설>

- 가. (X) 법령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직 기간 20년이 아닌 10년 이상 공무원의 경우가 수급요건에 해당합니다. 연금개시연령은 모두 65세(2009년 12월 31일 전 임용자의 경우 퇴직시기에 따라 지급시기 달라짐)입니다.
- 나. (O) 기여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입니다.
- 다. (X) 고액연금 수급 방지를 위한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80%가 아닌 160%(1.6배)입니다.
- 라. (O) 우리나라는 기금제와 기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마. (O) 유족연금 적용률은 60%입니다.
- 바. (X) 연금지급률은 재직기간 1년당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9%가 아닌 1.7%입니다.

답: ②

28.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예산과정은 어느 한 시점(t)을 놓고 보면 t+1년의 예산을 편성하고, t년의 예산을 집행하고, t-1년의 예산을 결산하는 것이다.
-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가 완료된 예산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정책질의와 찬반투표를 거쳐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에 의결해야 한다.
- ③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어 각 부처에 이미 배정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경기과열, 임금인상, 세입부족 등의 상황에서는 예산지출을 지연시킬 수 있다.
- ④ 국회는 회계기록의 회계검사와 결산보고서의 심의·의결을 통해 행정부의 예산집행이 예산안에 반영된 입법부의 의도를 충실히 따랐는지를 확인한다.

<해설>

- ① (O) 우리나라의 경우 예산주기는 통상 3년입니다.
- ② (O) 헌법 제54조 제2항
- ③ (O) 「국가재정법」제43조
- ④ (X) 회계기록의 회계검사는 감사원의 기능입니다(헌법 제97조).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은 국회의 기능입니다(「국회법」 제128조의2).

헌법
제54조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제97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국가재정법」
제43조(예산의 배정) ⑤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 및 예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예산배정을 유보할 수 있으며,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국회법」
제128조의2(결산의 심의기한)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답: ④

29. 예산원칙과 그 예외 간의 연결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단일성의 원칙 - 기금
- ② 사전의결의 원칙 - 특별회계
- ③ 한정성의 원칙 - 이월
- ④ 완전성의 원칙 - 수입대체경비

<해설>

- ② (X) 특별회계는 단일성의 원칙, 통일성의 원칙 예외입니다(특단통).

답: ②

30.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품목별 예산제도(Line Item Budgeting)는 예산지출에 대한 통제와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
- ② 성과주의 예산제도(Performance Budgeting)는 사업성과가 좋은지 나쁜지의 결과에 초점을 두며 예산을 들여 사업과 활동별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알기 어렵다.
- ③ 계획 예산제도(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는 의사결정이 지나치게 집권화되고 전문화되어 외부통제가 어렵다.
- ④ 영기준 예산제도(Zero Based Budgeting)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중간관리층을 포함한 구성원의 참여 및 이들의 상향적 의사소통 통로가 확대된다.

<해설>

- ② (X) 성과주의 예산제도에서는 사업의 성과보다는 산출물에 초점을 둡니다. 또한 사업 또는 활동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정부가 무엇을 하는지 알기 쉽습니다.

답: ②

31.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남성과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검토한다.
 - ② 성인지예산서에는 양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 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지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
 - ④ 예산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기금사업은 해당되지 않는다.

<해설>

- ① (O) 「국가재정법」 제16조
- ② (O) 「국가재정법」 제26조
- ③ (O) 「국가재정법」 제26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 ④ (X) 우리나라의 경우 예산과 기금이 작성 대상입니다(「국가재정법」 제68조의2).

「국가재정법」
 제16조(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정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포함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性認知)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① 정부는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답: ④

32. 예산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총체주의는 기존의 예산을 토대로 수정하여,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예산결정을 추구한다.
 - ② 점증주의는 각 이해집단 간 정치적 상호작용을 통한 최적의 예산결정을 모색한다.
 - ③ 단절균형모형 관점에서 예산결정의 참여자들은 점증적인 예산결정 행태를 보이다가, 특정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하면 자신들의 예산결정 패턴을 급격히 변화시킨다.
 - ④ 다중합리성모형 관점에서 예산과정은 하나의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전개되기보다는 예산과정의 다양한 단계별 특성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서 실제 예산배분이 결정된다.

<해설>

- ① (X) 기존의 예산을 토대로 수정하여,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예산결정을 추구 → 점증주의
- ② (O) 상호 조정, 협상과 타협 중시 → 점증주의
- ③ (O) 단절균형모형은 예산 재원의 배분 행태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건이 상황에 따라 균형 상태에서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단절 현상이 발생한 후 다시 균형을 지속한다는 이론입니다.
- ④ (O) 다중합리성모형은 하나의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전개된다는 전통적 예산이론에 반대되는 입장으로 실제 예산재원이 배분되는 것은 예산과정의 다양한 단계별 특성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봅니다.

답: ①

33. 정부회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복식부기에서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비용의 발생은 차변에 기입해야 한다.
 - ② 현금주의는 비용과 수익을 알 수 없어서 경영성과 파악이 어렵다.
 - ③ 발생주의 회계방식은 자의적인 회계처리가 불가능하여 통제에 유리하다.
 - ④ 현금주의는 교량, 박물관, 체육관 등 가시적 치적 쌓기에 관심이 있는 정치인들이 선호하는 회계제도이다.

<해설>

- ① (O) 차변은 왼쪽을 의미합니다(참원대오). 왼쪽에는 자산의 증가, 자본과 부채의 감소, 비용의 발생 등이 기입됩니다.
- ② (O) 현금주의는 현금주의에서는 재화와 용역을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현금으로 회수되지 않는 동안은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고, 재화와 용역을 제공받았다 하더라도 현금으로 지급되기 전에는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아 경영성과 파악이 어렵습니다.
- ③ (X) 발생주의는 채권·채무의 자의적 추정이 불가피하여 자의적인 회계처리가 가능합니다.
- ④ (O) 선심성 사업 등 가시적 치적 쌓기에 관심이 있는 정치인들은 단식부기-현금주의를 선호(부채를 명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움)합니다.

답: ③

34.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묶은 것은?

- 가. 중기적 재정운영보다는 개별 사업 위주의 단년도 예산 편성에 적합하다.
- 나. 각 부처는 소관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출 한도 내에서 사업의 재원을 자율적으로 배분한다.
- 다. 재정 운용의 집권과 분권의 조화를 추구하는 하향적 예산편성 방식이다.
- 라. 한도액의 설정으로 각 부처의 과도한 예산요구 관행을 줄일 수 있다.
- 마. 지출 한도가 사전에 제시됨에 따라 부처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업별 예산 규모를 결정할 수 있어 책임성과 권한이 강화된다.

- ① 가, 나, 다
- ② 나, 다, 라
- ③ 가, 나, 라, 마
- ④ 나, 다, 라, 마

<해설>

- 가. (X) 중앙예산기관은 국정목표와 우선순위에 따라 자원배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분야별·부처별 지출한도를 결정하여 각 부처에 통보합니다. 중기적 재정운영계획이 필요합니다.
- 나. (O)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는 중앙예산기관이 사전적으로 지출 총액을 결정하고 전략적 자원 배분을 위한 분야별·부처별로 지출 한도를 설정하여 그 지출 한도 내에서 각 부처가 사업별로 재원을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 다. (O) 중앙예산기관과 행정수반에게 예산지출한도 설정을 맡기고, 부처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합니다. 자금관리의 분권화를 강조하지만, 의사결정의 주된 흐름은 하향적입니다.
- 라. (O) 한도액의 설정으로 과다 요구·대폭 조정 등 비합리적인 예산 편성 관행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 마. (O) 지출한도가 사전에 정해짐에 따라 부처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업별 예산규모를 결정할 수 있고, 책임성과 권한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답: ④

35. 다음 중 (가)와 (나) 안에 들어갈 지방자치단체 사무배분 원칙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
|---|
| (가) - 모든 사무는 기본적으로 지방정부가 담당하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처리하기 곤란한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
| (나) - 지방정부가 배분받은 사무는 되도록 지방정부가 자기 책임 아래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 | | |
|-----------|---------|
| (가) | (나) |
| ① 보충성의 원칙 | 포괄성의 원칙 |
| ② 불경합의 원칙 | 효율성의 원칙 |
| ③ 현지성의 원칙 | 불경합의 원칙 |
| ④ 효율성의 원칙 | 보충성의 원칙 |

<해설>

가: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처리하기 곤란한 사무를 처리
→ 보충성의 원칙

나: 지방정부가 자기 책임 아래 독자적으로 처리 → 자기의 책임하에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사무를 포괄적으로 배분 → 포괄성의 원칙

| |
|--|
| <p>「지방자치법」</p> <p>제11조(사무배분의 기본원칙)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종합적·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사무를 주민의 편익증진, 집행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배분하여야 한다.</p> <p>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배분하는 경우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시·군 및 자치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시·도의 사무로, 시·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p> <p>③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배분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재배분할 때에는 사무를 배분받거나 재배분받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자기의 책임하에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사무를 포괄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p> |
|--|

답: ①

36.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단층제는 중층제보다 행정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
- ② 중층제는 지역 특수성에 맞는 신속한 행정을 도모할 수 있다.
- ③ 단층제는 중앙정부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는 배경이 될 수 있다.
- ④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단층제로 운영되고 있다.

<해설>

- ①, ③ (O) 단층제는 주민의 생활행정에 대한 책임이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자치단체 간 갈등이 중앙의 이슈가 되어 중앙정부가 비대화될 수 있습니다.
- ② (X) 중층제가 아닌 단층제가 지방의 특수성·개별성 고려에 용이합니다(정부와 주민 간 의사소통이 중층제에 비해 원활함).

답: ②

37. 자치경찰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묶은 것은?

- 가. 제주도 자치경찰단장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임명하고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나.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는 자치경찰사무에 해당한다.
- 다. 지역 간 치안 격차의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
- 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 ① 가, 나
- ② 나, 다
- ③ 다, 라
- ④ 가, 다, 라

<해설>

- 가. (X) 제주도 자치경찰단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9조).
- 나. (X)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는 국가경찰사무입니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 다. (O) 경찰기관의 설치·운영을 국가(연방이나 주)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자치경찰제에서는 경찰행정의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라. (O)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9조(자치경찰단장의 임명) ① 자치경찰단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경찰의 임무) 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제4조(경찰의 사무) ① 경찰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가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 다만, 제2호의 자치경찰사무는 제외한다.

제18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②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답: ③

38.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관통합형은 주민이 선출한 의원들이 행정을 담당하기 때문에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
- ② 기관분리형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적용되어 권력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 ③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기관통합형이며 중앙통제형 강시장·약의회의 구도를 취하고 있다.
- ④ 우리나라는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투표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할 수 있다.

<해설>

- ③ (X), ④ (O)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는 기본적으로 기관대립형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2022년 1월 13일 시행)으로 주민투표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와 집행기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답: ③

39. 지방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을 갖는다.
- ②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 ③ 의회 의원의 자격상실 결정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 ④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의 수는 지방의회가 조례로 정하고,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임명한다.

<해설>

- ① (O) 「지방자치법」 제49조
- ② (O) 「지방자치법」 제80조
- ③ (X) 「지방자치법」 제93조에 따르면, 자격상실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X,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X).
- ④ (O)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80조(일사부재의의 원칙)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제92조(자격상실 의결) ① 제91조 제1항의 심사 대상인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자격상실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답: ③

40.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묶은 것은?

가.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다. 주민의 감사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라.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 모든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 ① 가, 나
- ② 가, 다
- ③ 가, 나, 다
- ④ 가, 다, 라

<해설>

- 가. (O) 「지방자치법」 제19조
- 나. (O) 「주민투표법」 제24조
- 다. (O) 「지방자치법」 제21조
- 라. (X)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는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9조(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 ①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주민의 감사 청구) ③ 제1항에 따른 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제25조(주민소환) ①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주민투표법」
 제24조(주민투표결과의 확정) ①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답: ③